

# 마북동 탄약고 이전 본격화...광주 군공항 이전 변수 되나

이전 예정지 연약지반 공사 시작

군공항 이전 난항 속 우선 추진

양향자 "공항 이전 당정청 협의 계속"

광주 서구 마북동 공군 탄약고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 의원의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광주서구 마북동 탄약고 이전을 위해 이전 예정지에 대한 연약지반 개선 공사를 시작했다.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인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신촌동 등이며, 연약지반 개선 공사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은 지난 2일 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냈으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68동과 부대시설에 대해 공사가 진행된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광주기지 영의 탄약고 이전 사업'(이하 군 탄약고 이전 사업)은 광주시 상무신도시 도로 확장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인접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마북동 공군 탄약고는 1975년 금호·마북동 일원 37만㎡ 부지에 설치돼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 212만㎡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

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예초 탄약고 이전 사업은 2006년에 시작해 202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6년 광주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잠정 보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탄약고 이전만이라도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마북동 탄약고는 1976년 신축된 뒤 40여년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서 철거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이 장기 사업인 만큼 마북동 탄약고 이전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군공항 이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탄약고 이전을 우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 2009년 사업을 재추진해 지난 2015년 탄약고 이전 예정지인 서창동의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이듬해 8월 설계를 완료했다.

양향자 의원은 "시민의 안전 및 재산권 확보, 국가안보상의 문제, 광주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마북동 탄약고 이전이 절실하다"면서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조기 가시화 및 예산 증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연약지반 공사와 탄약고 시설공사(신축공사)는 분리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사업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정청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공수처로 무소불위 검찰 권한 통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제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 맞춰 직접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

을 약화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 권한은 여전히 막강할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은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는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이는) 안타까운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잠으로 역사적 인 날"이라며 "모두가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공허한 사과보다 지역현안 법안 처리로 진정성 보여야"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구속 사과 반응  
한전공대·아특별 해결 촉구 목소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따른 사과에 대해 "진정성과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이 광주·전남·북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제2 지역구 갖기' 등을 내놓았지만 정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표결 과정에 제2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해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별) 개정안, '5월 법안'에 대한 처리 과정이 국민의힘의 '잇단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한전공대법안과 아특별 등

의 지역 현안 법안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 오르 지 못하고 있다. 한전공대법안과 아특별 등은 시간을 다투는 현안 법안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정상 운영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아특별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법의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들 법안은 '특정 지역 지원' '사립학교 지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이 호남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도 아특별 처리를 촉구해 나갔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날 사과는 보수정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반성하는 '대리사과'의 성격보다는 탄핵 이후로도 혁신이 부족했다는 자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로운 보수정당으로서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주홍글씨처럼 남은 '적폐 정당'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고강도 쇄신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읽힌다. 당장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아온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낙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백번이라도 사과" "사과인지 고집인지"...국민의힘 계파별 엇갈린 반응

민주당 "실천으로 이어지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가 나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영어의 몸으로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진솔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우리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로 많은 국민이 실망했고, 그 결과가 4번의 선거로 나타났다"며

"당여 여러 번 사과했지만, 국민이 미흡하다 느낀다면, 열번 백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예상보다 강도높은 사과 수위를 놓고 일부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계열 의원들은 반발했다. 친박계인 박대준 의원은 통화에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했다.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됐다"며 "대통령 수감은 당의 배신이나 가짜뉴스, 왜곡, 선동 등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이런 면을 간과해 단순한 잘못으로 치부했다. 고차원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사과인지 고집인지..."라며 "관심 끄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이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상임고문도 "사과문의 팩트가 틀렸다. 없는 죄를 이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웠다"며 "(사과로) 고정 지지층만 분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늘의 사과와 쇄신에 대한 각오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다"고 논평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 김 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으나 본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기억한다. 세월호 유가족을 찾았으나 그 관련 법안에는 반대했던 그 모습도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양한의원  
생각보다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